월요광장

‘클래식 음악하기’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다음 주 주말 광주 ACC 예술극장2에서 열릴 예정인 정명훈 피아노 독주회를 감상하기 위해 시간에 맞추어 티켓 예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접속자 수 초과로 웹페이지가 한동안 먹통이 되고 말았다. 5분 정도 지나 겨우 접속이 되었을 때는 이미 예매 가능한 좌석수가 많이 남지 않았다.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골라 서둘러 예매를 마치고 나왔다. 좌석 거리 두기 원칙으로 300석이 채 안 되는 한정된 좌석수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매진의 빠른 속도는 놀라웠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장르를 불문하고 음악가들이 1년 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클래식 음악 장르의 대중적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여러 징후가 보인다. 여전히 유명 음악가나 음악 단체에 편중되는 음악회 티켓 판매율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클래식에 대한 대중적 관심 자체가 조금씩 늘어간다는 뜻이다.

이 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많은 전문 음악가와 음악 단체들이 유튜브와 여러 SNS 매체를 통로로 양질의 클래식 음악 콘텐츠를 대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댄스 비트의 케이팝과 다소 과장된 감성의 트로트 음악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새로 클래식에 입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출판 시장에서 클래식 관련 교양서 발간의 눈에 띄는 증가와 상당히 높은 판매고로도 나타난다.

클래식은 악보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다른 장르의 음악과 차별성을 보인다. 한데 이러한 악보의 기능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소수 전문가(전공생)의 음악이라는 식의 오해가 그것이다. 하지만 선입견 없이 이런 물음에 답해 보자.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이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아마추어일 가능성이 높을까? 당연히 악보를 보는 쪽이다. 서양 근대음악사의 전개 과정에서 악보는 음악 시장의 발전과 맞물려 잠재적 악보 소비자로서의 아마추어와 대중을 상대로 발전하고 표준화되어 왔다. 악보를 매개로 한 이러한 광범위한 ‘대중성’이야말로 ‘클래식’이라 불리는 서양 근대음악의 한계이자 장점이다.

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어느 후배는 코로나 직전부터 간단한 기타 편곡 악보와 시범 연주를 동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 조만간 20만 구독자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 그 구독자들은 대부분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클래식 기타 연주를 배우거나 즐기는 아마추어들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2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수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한 가지는 악보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곡명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나 자막도 없이 악보와 연주 동영상만을 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소용이 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이러한 비대면 소통은 악보에 거의 모든 음악적 정보를 담는 클래식 장르에 유리한 일이다.

클래식이 ‘전문가들만의 음악’처럼 간주된 것은 사실상 ‘음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들어서의 일이다. 레코딩과 음반은 한편으로 실수 없는 정밀한 연주를 요청하며, 대량 소비의 음반산업 메커니즘은 독점적 스타의 희소성을 찾기 마련이다. 이 시기 ‘불후의 명반’에 담긴 ‘명연주’들은 기념할 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타 연주자들의 몸값을 턱없이 올리려는 기획사들의 담합이 커져 가고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그런 음반의 시대가 디지털 매체 혁명과 함께 사라져 가고 있다. 이제 다시 전문가 중심의 음악에서 아마추어 중심의 음악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크리스토퍼 스몰은 음악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주장하면서 ‘음악하다’ 혹은 ‘음악하기’(musicking)라는 용어의 적극적 사용을 제안했다. 그런 그가 남긴 다음과 같은 역설적 표현이 있다. “음악은 너무 중요해서 음악가들에게 맡겨 둘 수 없다.”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전문 음악가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예컨대 정명훈과 같은 음악 장인이 다루는 피아노는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소리를 낸다. 하지만 그렇다고 음악 장인의 손길에 대해 찬탄만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음악을 여느 ‘기술’과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다.

예술이 기술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종종 ‘기술적’ 수준과는 무관한 ‘예술적’ 소통의 차원이 인간 본연의 역량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와 전문가 사이의 다리를 놓는 것은 ‘클래식 음악하기’의 가능성이자 본질이다.

꿈꾸는 2040

다른 20년을 준비하자

하정호
위민연구원 이사
광산구청 교육협력관

재·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내고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참패한 집권 여당도 아닌 야당이 먼저 구태와의 결별과 쇄신을 다짐하니 뜻밖이었다. 그만큼 칭찬이 자자했다. 비대위 출범 다음 날 떠밀리듯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회견장에 나섰다. “진심 없는 사과, 주어 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로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헌·당규를 바꾸어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낸 것 말고는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2030 초선의원 다섯이 따로 입장문을 냈다.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여당 인사들의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성했다. “바뀌어야 할 당의 관행과 기득권 구조,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 국민 설득 없이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 더 이상 눈 감거나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일로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초선 5적’ ‘초선족’으로 불리던 이들은 결국 이틀 뒤 입장문을 다시 냈다. 자신들의 반성문이 왜곡되었다며 언론 개혁을 거론했다. 반성은 웃기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적극적 지지층을 제외하면 이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재야도, 시민사회도, 노동조합도 비판의 동력을 잃었다.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거나 집권 세력과 이득을 나누면서 자초한 일이다. ‘달리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수 양당 중에서 조금이라도 덜 나쁜 후보를 고르는 일만 남겨졌다. 민주당은 이런 보수 양당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차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게 선거라고 한다. 그런 의원님들로서는 민주당이 오만해졌다는 평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조민보다 차라리 정유라가 낫다’는 청년들의 냉소는 나경원을 문제삼지 않는 언론과 검찰 때문이라고 둘러친다. 시민들의 분노가 갈 곳을 잃으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집권 여당에게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거머쥔 것으로 조국 사태가 평가받았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에 캡을 씌워 소수 정당의 진출을 가로막은 바로 그때,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의석 수가 모자라 선거법을 제대로 못 바꾸었다면 위성 정당이라도 만들지 않아야 했다.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이 국민의 지지만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했다. 그것이 촛불혁명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보일 최소한의 예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촛불혁명을 배반했다.

당헌·당규를 바꾸어 서울과 부산에서 후보를 낸 것은 두 번째 잘못이었다. 갈 곳 잃은 민심의 퇴로를 막아 놓고 ‘그래도 민주당’을 찍으라고 하는 건 오만하고 비겁하며, 부당하다.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 인사들에게 선거에서의 패배는 자기 몫이 좀 줄어드는 문제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꾸어야 할 절실함이 없다. 하지만 삶이 고단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진보 정당의 몰락이 뼈아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진보 진영 모두의 패배이다.

촛불혁명과 나라의 운명을 민주당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촛불혁명으로 꿈꾸었던 세상을 다시 그려 가자. 청와대의 인적 쇄신은 진보 진영의 많은 인사들에게도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촛불 연합 정부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남은 일 년은 촛불시민들과 함께 다음 이십 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어야 한다. 촛불혁명을 완수할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의회, 대통령의 요청으로 기후위기 시민의회를 열어 입법 권고를 한 경험이 있다. 선거법과 헌법 개정, 적폐청산의 과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며 합의해 갈 수도 있다. 대선 후보들에게도 선거법과 헌법을 고쳐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 이런 노력들로 국회에서 다수파 연합을 구성해 사회경제 개혁을 꾸준하게 밀고 나갈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촛불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민주화를 이룬 국민의 위대함은 민주당만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잊은 것은 아닌지 아프게 성찰하겠다”는 초선 의원들의 반성이 반가웠다. 변화는 지금 당장,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 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에 부쳐

윤명심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본부장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961년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지원 아래 전신인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창립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60년 동안 협회는 시대 환경에 맞춘 인구 변화 대책, 임신·출산·육아 환경 조성 등 가족 계획과 저출산 대응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궁극적 삶의 목표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준비 또한 활발히 추진하였다. 이는 본부와 전국 시도에 13개 지회라는 조직망을 갖춘 장점 덕분에 가능한 성과였다.

국가 정책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지역에 배치하고 13개 사업장에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여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가치관 교육과 홍보,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는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대외적 국가 경쟁력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국가와 함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자부한다.

1960년대 초 창립 당시 만해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여파와 정국 혼란으로 세계 최빈국 처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인구협회를 위시한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경제활동 시설이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규모의 과부하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인구 조절 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시절이었다.

협회는 활동 초기 농촌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의 보건 및 사회의식 개선과 임신중절을 피임의 차후 방편쯤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모성 보호와 여권신장을 위한 가족계획 어머니회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90년대 말 IMF 위기는 우리 사회의 인구 변화, 즉 결혼과 출산에 심각한 위기를 겪게 하고, 국민들의 인식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선에서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요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통한 경제활동 증가와 양성평등 인식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급기야 한 해 출생아 수는 50년만에 100만 명에서 27만 명(2020년)으로 줄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고, 취업의 기회가 줄어 젊은이들은 희망을 찾기 쉽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지속적인 출생률 저하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초고속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인구 규모 문제만 아니라 인구 형태가 병적인 구조로 탈바꿈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특히 선진국과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의 공통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는 협회가 정부와 함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의 원인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고 제시하고자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초중고생 이나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책임임을 인식하는 소양 교육과 사회적인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가족 친화적인 새로운 사업을 창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여성과 아동 중심의 건강센터 운영이 출산·육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13개 지회의 가족보건의원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등록하여 공공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열정의 60년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공공 보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대한다.

社說

민주당 당권 주자들 ‘바닥 민심’ 잘 살펴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경선이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 간 3파전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일제히 광주를 찾아 호남 구애 경쟁을 펼쳤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5·2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이들 세 명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세 후보는 지난주 출마 선언을 한 뒤 나란히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5선의 송영길 의원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며 “오월 정신을 계승해 민생을 수호하고 제4기 민주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4선의 홍영표 의원은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해 호남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한 뒤 “호남정신으로 재무장하고 깊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시 4선인 우원식 의원은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에 답에 있다”며 “광주 정신으로 민주당을 혁신해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다섯 명을 선출하며, 합동연설회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새 지도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재보선 참패 속에서 당을 재건하고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당내 분위기가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초선 의원들의 쇄신 요구에 강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당심과 민심 간 괴리가 커 보인다. 하지만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당권 주자들은 바닥 민심을 잘 살펴 이번 전당대회를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적 장애 제거된 ‘나주 SRF’ 이제 상생으로

나주 SRF(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지만 반려당한 뒤 소송을 냈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환경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들어 거부한 나주시의 행정 처분과 관련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관련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고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환경영향 조사에서도 환경상 피해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했다. 결국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로 4년 가까이 멈춰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조만간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난방공사는 현재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는 판단 아래 가동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소송 결과를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만나 공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 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했다. 이처럼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된 열병합발전소가 4년 동안이나 멈춰 서 있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상생을 위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광주 전남 시·도가 상생 차원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혁신도시 발전 방향과도 맞는 일이다.

無等鼓

함성은 사라지고

달포 뒤면 중국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이 32주년을 맞는다. 1989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됐던 그 초여름으로부터 강산이 세 번 바뀔 만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당시 톈안먼의 함성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듯하다.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광주5·18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화를 견인해 낸 역사적 사건’으로서 널리 기념되는 것과는 달리, 톈안먼 민주화 운동은 중국을 비롯한 지구촌 전역에서 서서히 잊혀 가는 중이다.

지난 4일엔 톈안먼 민주화 운동의 위축된 위상을 드러내 주는, 작지만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에 동조하고 무력 진압에 반대했다가 당에서 쫓겨난 ‘비운의 지도자’ 자오쯔양(趙紫陽)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유족이 이날 베이징 푸창후퉁에 있는 집을 떠난 것이다. 이 집은 자오쯔양이 당에서 축출된 이후 지난 2005년 1월 86세의 나이로 숨질 때까지 16년가량 가택연금을 당했던 곳이기도 하다.

자오쯔양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매년 그의 기일인 1월17일과 생일, 청명절, 톈안먼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에는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푸창후퉁의 집을 찾았지만 이제 더 이상 추모객이 몰리는 광경을 볼 수 없게 됐다. 1989년 당시 당 총서기를 맡아 덩샤오핑(鄧小平)의 후계자로 주목받았던 자오쯔양은 지난 1998년에는 홍콩 인권단체에 의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천거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연금 해제를 촉구하는 서한이 100만 통이 넘어서는 등 적지 않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홍콩의 유력 신문 명보는 지난 5일 “자오쯔양의 유족들이 32년간 살아 온 푸창후퉁에서 이삿짐을 쌌다”고 전하면서 “공식적으로 자오쯔양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굳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지금, 당시 톈안먼에서 시위 학생들과 대화를 모색하려 했던 자오쯔양의 퇴조는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때나마 중국 인민들이 꿈꾸었을 ‘민주화의 봄’에 대한 기대 역시 사라지고 있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